

단설대학원의 특성화·내실화 방안

김 신 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 단설대학원의 역할 기대와 육성 방안

학사학위 과정이 없는 단설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현행 대학원 제도는 이론 중심, 학문 중심의 교육과 재교육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력 양성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의 유형으로 보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대부분이고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법 관련조항(제109조 제2항)이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 없는 별도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설대학원의 이러한 설립 배경과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단설대학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해야 하는 기대를 안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관련한 국제 관계, 외교, 통상 분야의 전문 인력과 정보화와 관련한 컴퓨터, 통신, 정보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론 위주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대학원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방향에 부응하려면 단설대학원은 그 기능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설립

요건을 조정함과 아울러 운영을 내실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의 대학원 체제가 갖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탈피해야 함은 물론,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질 높은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으려면 단설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화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2. 단설대학원의 유형과 프로그램 특성화

단설대학원은 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만 두는 형태의 '대학원 대학' 내지 고등교육기관이다. 즉,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대학원을 말하며, 종합대학교 체제 속에서 학사 과정에 동일계 학과가 없이 설립된 대학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도 특수대학원 중에는 학사 과정 학과와 관련 없이 설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대학원 중에도 서울대 행정대학원·보건대학원·환경대학원,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처럼 학사 과정에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단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면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 기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제인 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 연합체나 개별 기업들도 단설대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별도로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설 국제관계 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나 정부 투자 기관들이 단설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근거 조항을 두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설대학원은 법령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대학원에 한하여 설립이 허용된다. 환언하면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성격의 단설대학원은 설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대학원은 특정 직업과 연계된 분야 중심의 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직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시제(야간제, 계절제)가 아닌 주간의 석사 과정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학위나 학술 학위를 모두 수여할 수 있으며, 박사 과정 설치도 가능하다. 전문대학원은 한 대학(교)에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며, 단설대학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 달리 전임 교직원과 독자적인 시설을 가져야 한다.

현재 각 대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전문대학원들은 거의 전부가 정시제 과정의 특수대학원들이다. 앞으로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부설 형태로도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원들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며, 단설 전문대학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학 부설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단설 전문대학원들은 개설 분야를 전문화·특성화하여 기능을 분담하고 비교우위를 갖도록 설립을 유도하고 지원·육성해야 한다. 우선 분야면에서 시급한 과제는 정보 통신, 통상 외교, 국제 관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인력 양성 등이지만, 그밖에도 사회와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설치 분야를 늘려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단설대학원에서 여러 분야의 학위나 전공을 함께 개설하는 것보다는 한두 분야를 전문화·특성화시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교육 운영 및 방식면에서도 다양화·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단설대학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문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다른 단설대학원은 이미 취업하고 있는 준 전문 인력을 보다 고도의 전문 교육을 통해 수준을 높이고 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계속교육·재교육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모든 단설대학원들이 집합교육 형태로 강의 또는 실습을 받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최신 정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대학원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방안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신대학원 대학'에서는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산업 현장에 교수가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석사학위를 부여하되, 단설 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단설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방안

단설대학원은 학부가 없이 독립된 전문대학원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 시설과 교직원 등 교육 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전문대학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원들은 자체

시설이나 교수가 없이 학사 과정의 교직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부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면, 교수 정원을 산출하는 데 대학원 학생수는 제외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원 설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는 물론 대학측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단설대학원은 독자적인 교육 여건의 구비가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교육부에서도 단설대학원 설치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교수·시설·재원의 확보 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관해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할 방침이다. 잠정적인 설립기준 골자를 보면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 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교원은 대학의 계열별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의 2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단설대학원은 학사 과정이나 타대학원의 교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초 교과목들도 독자적으로 개설해야 하므로 충분한 교수진과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영리 목적의 부실한 대학원들이 자율화 바람에 편승하여 난립되는 것을 막고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설대학원의 운영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거나 획일적인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설대학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사운영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존 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준하되 수업 연한, 이수 학점, 학위 취득 요건 등에서 분야

나 교육방식 등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 분야의 실무 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기업체나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은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단설대학원은 학사 과정이 없으므로 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통적이고 수요가 많은 교과목의 경우는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자체에서 개설해야 할 것이며, 개인차에 따른 개별지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설대학원은 타대학(원)과의 교류와 협동 및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과 연구가 편협되지 않고 다학문간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종합대학교들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유사한 분야의 단설대학원들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점의 상호 인정과 공동 강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김신복/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및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실장, 교육개혁심의회 실무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발전기획론』, 『비교행정론』(공저), 『정책학』(공저) 등이 있고, 다수의 교육학·행정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